태고종 前총무원장 운산 스님 입적

4월 2일, 세수 78세 · 법랍 60세



태고종 제 22 · 23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운산 스님〈사진〉이 세수 78세 법랍 60세를 일기로 4월 2일 오후 11시 입적했다. 운산 스님은 194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 용봉당 이재복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1968년 한국불교청년회 사무총장 등을 맡았다. 1975년 태고종 총무부장으로 임명이후 종단 업무에 매진했다.

운산 스님은 종단 법인 설립과 순천 선암사 총림지정, 사간동 전통문화전승원 건립 등을 이끌었다. 특히 종립대학인 동방불교대학과 일반대학원 과정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운산 스님은 종교간 대화에도 앞장서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운산 스님 문하에는 태고종 부원장을 역임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과 논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일산 덕양선원 주지 법상 스님 등이 있다.

운산 스님의 영결식은 4월 5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태고종 종단장으로 열렸으며, 다비식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 회향선원에서 엄수됐다. **노덕현 기자**

독단 정관 개정에 깊어지는 갈등

〈포교원-여성개발원〉

4월 1일 임시이사회 적법 논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장 선임을 두고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상 절차 외 이사회를 열고 신임원장 임명과 정관 개정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개정관 정관에 따라 원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30일 이사장 승인이 없는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후보를 추천, 이후 이사장의 원장 미임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지명, 운영해왔다. 이에 이사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원장 직무대행으로 비구니 정현 스님을 임명했지만 업무인수 과정에서의 개발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정현 스님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사회 적법성 인정되나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사상 초유의 원장 공석 상태가 지속, 이사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열었음을 주장했다.

현재 쟁점은 이 이사회의 적법여부다. 불교여성개발원 측 주장과 달리 포교원은 임시이사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교원 측은 4월 2일 입장발표를 통해 "1일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가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불법이사회에서 결의된 정관 변경과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은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4월 1일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 후 여성불자들이 여성개발원 입구에서 결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개정관 정관에 따라 원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30일 이사장 승인이 없는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후보를 추천, 이후 이사장의 원장 미임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지명, 운영해왔다. 이에 이사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원장 직무대행으로 비구니 정현 스님을 임명했지만 업무인수 과정에서의 개발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정현 스님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사회 적법성 인정되나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사상 초유의 원장 공석 상태가 지속, 이사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열었음을 주장했다.

현재 쟁점은 이 이사회의 적법여부다. 불교여성개발원 측 주장과 달리 포교원은 임시이사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교원 측은 4월 2일 입장발표를 통해 "1일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가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불법이사회에서 결의된 정관 변경과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은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사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도 부여했으며, 원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권도 이사회에 부여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설립 당시와 달리 2012년 4차 개정에서 이사회에 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원장 의결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3월 21일 5:5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이후 3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측이 이사 및 감사 명의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포교원은 3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이 지혜로운 여성으로 전출한 불교여성광장 기금 등의 재정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추가로 3월 28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포교단체의 종령을 통한 관리기준 마련 방침이 발표됐다.

이사회 권한 강화, 견제는 누가?

문제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스스로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문제가 확산된다는데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사회로만 의결구조를 가져 그동안 불교계 일각에서 '서클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활동력있는 여성불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온 초기 조직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을 골자로 종단의 지도관리, 인사권까지 여성개발원 이사회가 갖는다면 사실상 독주체제를 띄게 된다.

2018년 2월 9일 개정된 7차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을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에 대한 자격은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조계종 신도, 일정금액 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조계종 신도, 회비 납부 외에는 모호한 기준이다.

초창기 여성개발원 업무에 관여했던 한 여성불자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 인 상황에서 이사 선임 또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는 구조다. 주요의결이 친소관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친소관계에서 배제된 여성불자들은 자연스럽게 개발원을 외면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회원여성을 대표하는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 10% 참여한 총회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대의성을 가져오는 총회에 대한 제도상 근거가 없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포교신도단체들이 회비 납부를 기반으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구성, 이사회에 대해 견제, 또는 대표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다.

일부 명망있는 여성불자들과 종단의 주도로 이뤄진 조직체에 맞는 현행 제도는 이제 여성개발원이 원하는 전체 여성불자를 대표하는 조직, 자율적인 운영으로 불자여성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1일 임시이사회 후 임시총회를 열고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임시총회에는 전체 800여 회원 중 79명 만이 참여했다.

여성개발원 관계자는 "회비 납부 기준으로 320여 명 중 79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관상 근거는 없지만 총회 형식을 통해 향후 대표성을 띄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백년대계본부장에 정념 스님

4월 2일 임명,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장 겸직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백년대계본부 본부장에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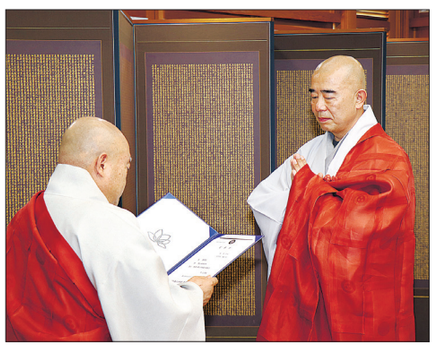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백년대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백년대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공동본부장이던 도법 스님과 호성 스님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장기화됐다.

백년대계본부는 정념 스님의 본부장 임명으로, 현재 신설 예정인 △화합과혁신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출범과 4월 17일 열리는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념 스님은 백년대계본부 산하 위원회인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키로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본부장 임명식에서 "백년대계본부는 총무원 집행부 임기와 관계없이 잘 꾸려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미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월정사 주지스님을 모셨다. 백년대계본부가 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념 스님은 "36대 집행부 기조가 화합과 혁신인 만큼 중차대한 과제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념 스님은 임명식 후 백년대계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설득과 공감이라는 가치 아래 종단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오른쪽)이 임명됐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정념 스님은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그림 그리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차분히 각계의 뜻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불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을 위해 백년대계본부가 맡은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향후 10년이면 기존에 형성된 문화와 제도, 사회적 가치들도 변화의 시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직시해 종도들과 미래의 방향설정을 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다.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제11 ·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득세법 개정안, 불교계와 논의 全無"

조계종, 국회 본회의 앞둔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제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되며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불교계와 논의가 전혀 없이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4월 1일 재무부장 유승 스님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종교인 전체에 관련된 국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일반언론에서 스님들을 '퇴직소득 감면 수혜자'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은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종교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한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된 언론보도 시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